제 5 장
기사수정 / 열람 · 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수정 / 열람 · 검색 차단 사례

사례 45 2019강원조정9 · 10 정정 · 손배청구

원 보도에 신청인 측 입장을 추가하고 보도에 연동된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노총 보육지부 조합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사실을 보도하면서 C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무임금으로 근무하게 했으며 공익제보하는 교사를 부당해고 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자회견 상황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제공했다.

신청취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은 해당 교사의 해고는 원장에 의한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여러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고, 위 보도에 언급된 급식 비리 등은 신청인 어린이집과 무관한 사례인데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모든 비리가 신청인 어린이집 사례인 것처럼 보도돼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인터뷰한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부족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등에 절차대로 징계해고된 것으로, 원장의 갑질로 인한 해고가 아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어린이집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청인은 유튜브 영상에서 기자회견 중인 보육교사의 얼굴이 노출돼 문제의 어린이집이 신청인 어린이집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양 당사자는 기사 말미에 신청인의 입장에 관한 문장을 삽입하고, 조정대상 기사에 연동된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는 것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A노총 보육지부 B지회는 C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C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차별했다.[중략]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자체가 관리 · 감독을 손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정보가 없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보게 되고, 결국 공익제보하는 보육교사만 해고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이들은 "C시는 출산보육과 공무원을 징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해야 한다."며 "C시의회는 공익신고 보호 조례와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가 문장]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부당한 계약 요구와 해고 등은 없었다고 알려왔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에 연동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삭제하여 기사 내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대상보도 중 가장 하단에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한 계약 요구와 해고 등은 없었다고 알려왔다'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사이트)에도 수정된 조정대상보도를 송고한다.

사례 46 2019서울조정1526 정정청구

유명 가수의 부친에 관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유명 가수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 데 대해 제목과 본문에서 실명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가수이자 제작자인 B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 외에 피해자의 '미투'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라면서 A와 B의 실명을 보도했다.

신청취지

보도된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할 당시부터 주장한 내용으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도 '미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만을 근거로 혐의사실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고, B의 혐의와 무관한 A가 함께 언급된 것은 부당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고, 항고사건 조사 시 C지검에서 B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신청인 B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A의 실명을 제목 및 본문에서 삭제하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가수이자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B를 조사해 온 C지검은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B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D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B의 주거지와 가까운 관할인 점을 고려해 D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추후 기소 또한 D지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C지검 측은 그동안 B가 받아온 혐의 외에 힘 있는 가요제작자였던 B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발인이 전 세계로 퍼진 '미투'라는 대대적 캠페인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혐의는 당연한 판단으로 보인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가수이자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연예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기사수정사항

1) 제목
- 기존: [단독] 'A父' B, 강간 등 혐의로 C지검 → D지검 이송
- 수정: [단독] B, 강간 등 혐의로 C지검 → D지검 이송

2) 본문 중
- 기존: 가수이자 아들 A를 인기가수로 키운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 수정: 가수이자 제작자 B가 강간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사례 47 2019서울조정1552 손배청구

방송 사실을 숨기고 영상을 촬영 및 방송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의 열람 · 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 부부의 버스킹 공연을 방송하면서 관객으로 참여한 신청인들이 가수 부부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공연 장소를 우연히 지나다가 관객으로 참여했을 뿐인데, 방송되지 않을 거라는 제작진의 안내와 달리 신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동의 없이 방송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결과

이 사건 신청 직후 조정대상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영상은 열람 · 검색이 차단됐고, 심리가 열리기 전 당사자 간 화해에 이르러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8 2019서울조정1585 정정청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있었던 논쟁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A항공 직원들이 공석이 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했고 이를 두고 직원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A항공 사내 게시판 캡처 화면을 함께 보도했다.

신청취지

A항공 노동조합인 신청인은 2019년 여름 일본행 제드(ZED, 항공사 직원 할인 항공권) 리스팅 숫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도 부정확한 제보만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2019년 여름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는 2018년도 대비 오히려 23%정도 감소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일본행 제드 항공권을 둘러싸고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 홍보팀을 취재한 후 보도한 것으로,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 근거로 제시한 제드 리스팅 수치는 조정대상기사 보도 이후 예약 취소분까지 포함된 것이라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수치에 관한 신청인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기사 제목 중 일부 표현과 본문 중 사내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에 관한 중재부의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이후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A항공 직원들이 공석이 된 일본행 비행기 티켓 수백 장을 직원가로 싸게 구매하며 '호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A항공 한 내부직원은 “항공사 직원이면 비행기 공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앞세워 일본행 티켓을 구매한 직원이 급증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이번 반일운동을 ‘가족여행 싸게 갈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A항공의 익명 게시판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자성을 촉구하는 글과 ‘사내 복지와 애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중략]

A항공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됐다. B씨는 “8월 14일까지 인천 출발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가 550명이나 된다.”며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는 직원,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랍다.”라고 적었다. 이어 “예전 같으면 여름 성수기때 감히 리스팅조차 못 할 시기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기는 좀 그렇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제드(ZED · Zonal Employee Discount) 티켓이란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성 할인 항공권이다.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 시점까지 아직 팔리지 않은 잔여석에 한해, 최대 90% 가까이 할인한 가격으로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직원에게 준다. 직원의 부모 및 형제, 자매 등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직원가 할인으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A항공 직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항공 노동조합 측은 “2019년 7월 ~ 8월 기준으로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는 기사 내용과는 달리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사례 49 2019서울조정1947/1948 각 정정청구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신원을 특정해 '사기 사건 가담자'로 단정보도한 데 대해 기사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보험수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이 브로커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 현직 경찰과 보험사, 브로커가 유착 관계를 맺고 수사 대상인 병원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의 '현직 경찰'로서,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현 근무지와 직함 등을 공개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돼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보도의 '현직 경찰'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도의 '브로커'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상대가 '브로커'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보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브로커와 병원장 간 대화녹음파일을 분석해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한 '경찰'이 모두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독자들이 기사에 언급된 '경찰'이 모두 신청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표현을 수정하는 조정안을 권고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이 병원은 A지역 B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난생 처음 겪는 경찰 수사에 병원장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그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다. 경찰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운동치료를 물리치료 시간에 포함시켜 병원 측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수령 해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보험사 16곳이 문제 삼은 금액은 모두 18억여 원. 병원 측은 그러나 운동치료는 물리치료 이후에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몰라 병원장들은 불안해했다.

병원장들을 돕겠다고 등장한 두 사람은 그런 심리를 파고들었다. 브로커는 병원장을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과 보험회사, 브로커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을 다수 말했다.[중략]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보험사기 전담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 E씨 이름을 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E씨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여줬다. E씨가 전한 내용은 '변호사들은 큰 도움이 안 되니,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의 명함도 보여주면서 보험사와 합의를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병원장들을 계속 압박했다.[중략]

내 뒤에는 십 수 년 관리해왔던 '인프라'가 있는데 100여명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관리한다." 한 마디로 평소 관리해왔던 '인프라'를 통해서 보험사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들에게 관리비용 명목으로 용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보험사기 전담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현재 D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 W의 이름을 댔다.'	➜	'병원장들이 그래도 미심쩍어하자 C씨는 현직 경찰 E씨 이름을 댔다.'
'W씨'		'E씨'
'(D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W씨가'		'현직 경찰이'
'W씨는 "평소 알던 C씨가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그 현직 경찰은 "평소 알던 C씨가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사례 50 2019부산조정56 추후청구

신청인의 성씨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했더라도 보도된 신청인의 혐의사실과 무죄판결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의사인 신청인이 펜션형 요양시설과 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요양시설에 유치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혐의에 관해 고등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며 추후보도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조정결과

위 보도에 신청인의 성씨가 실제와 다르게 보도됐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라 사건발생 시기 및 장소, 혐의내용과 판결내용이 일치한 점 등을 인정해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대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51 2019강원조정78 · 79 정정 · 손배청구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제목과 본문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기관장이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청사에 도착하자 상황실로 몸을 피하고,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도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2개의 사진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 기관은 실종자 가족들의 방문에 수색 책임자가 수색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가족들이 갑자기 기관장을 방문하겠다고 이동했으나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기관장이 상황 지휘를 위해 위기관리실로 이동하는 바람에 마주치지 못했던 것인데도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피한 것처럼 보도돼 기관과 기관장 모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 제목과 본문 중 사실관계가 다른 표현을 수정하는 것과 함께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실종자 가족들의 청사 방문 당시 기관장은 위기관리실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상황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고의로 실종자 가족의 면담요청을 피한 것이 아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신청인 측 해명에 따라 기사 말미에 신청인 측 입장을 추가했고, 기관장이 위기관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기관장과의 면담이 불발돼 항의하는 모습을 피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한 것을 두고 '몸을 피했다.', '꽁무니를 뺐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소지가 크다고 판단, 기사 제목과 본문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유가족 4명은 A기관장을 만나 현재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또 내일부터 독도 해상에 발령될 풍랑특보를 우려해 실종자 수색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 C시 도착 3시간 30분 전부터 C시로 가 A기관장을 만나겠다고 소방과 해경 관계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해경 직원이 위기관리실로 들어가는 사진 삽입]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몸을 피했다. 유족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날 때 A기관장은 4층 위기관리실로 꽁무니를 뺐다. 그 광경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B기관 공무원들은 유족들을 5층 소회의실로 안내했다. A기관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수정 전		수정 후
[제목] 'A기관장 면담 요구에 '꽁무니'… 실종자 유족들 분통'		[제목]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유족들 분통'
[본문]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몸을 피했다.'	➜	[본문] '유족들이 5층 기관장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A기관장은 기관장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와 4층 위기관리회의실로 갔다.'
'유족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날 때 A기관장은 4층 위기관리실로 꽁무니를 뺐다. 그 광경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다.'		삭제
본문에 삽입된 사진과 캡션		각 삭제

사례 52 2019경남조정93 반론청구

한 언론사의 단독보도를 엠바고를 파기한 보도라고 표현한 데 대해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한 언론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보도한 것에 대해 엠바고(embargo)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 언론사는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사 중 최초로 해당 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했을 뿐 경찰이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이 아닌데도,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신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신청인 언론사는 엠바고를 파기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엠바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경찰의 공식 확인이 있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엠바고를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경찰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열람 및 검색을 차단했고, 신청인이 해당 조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조정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